

공유재산 관리 '주먹구구'

부서별 중복관리... 전산화 등 행정보완 절실

대구시의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빨리 공유재산내역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2일 대구시의회 2006년도 대구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의 공유재산 총액은 8조338억3천200만원.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6조4천

236억4천500만원(80%), 건물 7천419억400만원(9.2%), 유가증권 7천415억7천700만원(9.2%), 공작물 642억9천600만원(0.8%), 입목죽 541억7천100만원(0.7%), 항공기 78억4천100만원(0.1%) 등이다.

하지만 공작물의 경우 2005년 6천180억6천500만원보다 5천537억6천900만원 감소, 유가증권의 경우 2005년 1조9천72억2천500만원에서 무려 1조1천656억6천800만원이나 대폭 줄어들어 7천415억7천700

만원만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물도 2005년 9천305억5천400만원보다 1천886억5천만원이 줄어든 7천419억4천만원으로 밝혀져 감소사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대구시가 이날 의회에 보고한 세입세출 현황에는 총 공유재산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 누락재산 신규 등록 때문으로 풀이됐다.

반면 감소사유는 등기부 미존재

재산의 삭제와 부서별 중복관리 부분의 정리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돼 정확한 평가와 함께 공유재산내역 전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돈규 시의원은 "대구시가 전체 공유재산 증가를 보고한 부분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작물을 비롯해 유가증권, 건물, 기계기구 등 대부분 공유재산들이 1년만에 수천억원이 사라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 앞으로 행정보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영세 행정부시장은 "건물부분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일반서류와 대조를 해본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확인작업을 전면 시행하겠다"면서 "다른 공유재산도 대조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장영훈기자

yhjang@kbmaeil.com